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남북한 관계

1997. 9

전 성 훈
(안보정책연구실 연구위원)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

- 목 차 -

I . 문제제기	1
II . 경수로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2
1. 현황	2
2. 전망	3
III . 경수로사업의 의미와 영향	6
1. 남한	6
2. 북한	9
3.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	12
IV . 한국의 고려사항	14
1. 주요 고려사항	14
2. 전략적 차원의 대책: 연계전략의 활용	17

I. 문제제기

- 북미 기본합의문('94.10.21, 제네바)의 핵심 요소인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은 주요 현안에 대한 관련국들의 입장차이와 돌발사태의 발생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진행되고 있음.
 - 공급협정이 한국형경수로의 제공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 보장에 대한 이견으로 예정보다 8개월이나 지연된 끝에 체결('95.12.15, 뉴욕)되었으며,
 -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발생('96.9.18)하여 4개월간 후속의정서 협상이 중단된 바 있음.

- 최근 함경남도 신포지역에서 경수로건설을 위한 부지준비공사가 착공('97.8.19)됨으로써, 대북 경수로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 본 보고서에서는 기본합의문 타결후 2년 10개월, 경수로 공급협정 체결후 1년 8개월만에 성사된 부지준비공사의 착공을 계기로,
 - 경수로사업의 추진과정을 검토·예측하고 동 사업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한국의 고려사항과 대책을 제시하고자 함.

Ⅱ. 경수로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1. 현황

- 기본합의문에 의거하여 시작('94.11.30, 북경)된 일련의 경수로 전문가회담은 북한이 한국형경수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공급협정 체결의 목표시한('95.4.21)을 넘기며 결실을 맺지 못함.
- 준고위급회담('95.5.19~6.12, 쿠알라룸푸르)에서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된 이후, KEDO와 북한은 1995년 9월부터 진행된 협상을 통해 공급협정에 서명('95.12.15)함.
 - 공급협정은 경수로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틀로서 18개조와 4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13개의 세부 후속의정서가 별도로 체결되어야 함.
- KEDO와 북한은 1996년 4월부터 후속의정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여 경수로사업의 기반이 되는 여섯가지 후속의정서에 합의함.¹⁾

1) ①「KEDO의 법적 지위와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에 관한 의정서」, ②「KEDO와 북한간의 통신의정서」, ③「KEDO와 북한간의 통행의정서」, ④「노무·물자·시설 및 기타 서비스에 관한 의정서」, ⑤「부지의 인수·접근 및 사용에 관한 의정서」, ⑥「채무불이행시 조치에 관한 의정서」 등임.

- 이와 함께 KEDO와 북한은 금년에 진행된 구체적인 실무협상에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19개의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경수로 착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완료함.
- 1997년 7월 28일 금호지역에 KEDO 사무소가 설치되었고, 8월 4일 경수로 건설현장과 한전본사를 연결하는 직통전화가 개설되었으며, 남북한 우편물 교류업무도 7월 24일부터 시작됨.
- 마침내 북한과 KEDO의 관계자들과 기술진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 현지에서 부지준비공사 착공식이 거행('97.8.19)됨.

2. 전망

- 경수로사업은 추진속도의 완급은 있을 지언정 사업 자체가 폐기되는 파국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 사업이 북한의 핵개발 동결을 위한 관건이라는 데 한·미·일 3국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고, 북한 역시 사업에 매우 적극적임.
- 그러나 경수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무엇보다도 경수로사업은 남북한 관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

이며,

- 기본합의문상의 다른 현안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을 뿐아
나라,
- 한·미·일 3국간에 합의해야 할 민감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임.

- 주요 예상문제점으로는 기술자문사(Technical Support
Consultant: TSC)의 위상과 역할, 경수로 건설비용 분담 및
사업배분 문제, 한국의 경수로비용 확보 문제, 원자로안전성에
대한 북한의 이의 제기, 인도일정 지연에 따른 문제 및 북한의
IAEA 특별사찰 거부 등을 들 수 있음.
- 특히 이번의 착공식은 본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부지정지작업이
며 원자로건설이 시작되기까지 적어도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함.
 - 본공사를 위해서는 부지준비공사 완료, KEDO와 한전간의 상
업계약 체결, 한·미·일 3국간의 비용분담 합의, 북한의 본공사
착수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앞으로 체결해야 할 7개의 후속의정서도 경수로의 안전과
인도일정 등에 관한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
- 기본합의문은 북미 양국이 고도의 연계전략(cross-issue linkage

strategy)을 구사한 결과로서 북한의 핵개발 포기과 대북지원에 관한 양측의 의무사항들이 “씨줄과 날줄” 식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바,

- 어느 일방이 기본합의문상의 특정 부분이 실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다른 부분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기본합의문의 전체적인 이행을 중단될 수밖에 없음.

- 한편 기본합의문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들이 기본합의문 이행과 연계될 수도 있는 데,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인한 경수로사업 지연이 대표적 사례임.

- 아울러 경수로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경수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많은 남한 인력과 장비가 드나 들고 남북한 인력이 함께 작업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사업에 장애를 조성할 가능성이 있음.

Ⅲ. 경수로사업의 의미와 영향

-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경수로사업이 갖는 의미와 영향을 남북한 각각의 입장과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1. 남한

가. 긍정적 측면

- 부지준비공사 착공을 계기로 경수로사업이 협상단계에서 구체적 사업추진단계로 진입함에 따라 그 동안 미국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이 주계약자를 관할하는 한국 주도로 국면전환됨.
 - 한전이나 남한의 시공업체들과 북한 당국이 실무적인 문제들을 직접 해결하는 차원으로 전환됨.
- 상당수의 남한 인력과 장비가 투입될 경수로사업은 분단 이후 남북한의 주민들이 가장 광범위하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바,²⁾
 - 남북한 주민간의 동질성 회복 및 신뢰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2) 오는 2004년까지 경수로 2기를 완성하는 것을 상정할 경우, 연인원 1천만 명이 참여하게 되며 공사가 본격화되면 하루에 최대 7천명까지 동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북한의 관료와 전문인력 및 건설종사자 등 다양한 계층의 북한 사람들에게 남한의 경제력, 사회제도, 사고방식 등을 자연스럽게 전파함으로써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교육·홍보할 수 있음.
- 경수로사업은 정치적 색채를 띄지 않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먼저 남북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남북화해와 민족의 공동발전 및 평화통일의 초석이 될 것임.
 - 구체적으로, 경수로사업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원함으로써 전력난 해소와 함께 남북간 에너지교류의 시초가 될 수 있음.³⁾
- 경수로사업을 통해 북한 원자력 기술자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여 인적정보를 축적함으로써 북한의 원자력 기술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북한 핵의 불모가 되어 있고,
 - 북한의 핵능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등과의 정보교환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 현재 북한의 최대 전력생산능력은 700만KW이며 실제가동률은 400만KW임. 따라서 200만KW용량의 경수로 2기는 현재 북한의 전력생산량의 50%에 해당됨.

- 경수로사업은 북한의 핵활동에 관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하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음.
- 경수로협상과정에서 향후 남북교류를 위한 구체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생산됨.
 - 출입국, 통신·통행, 통관, 의료자원, 은행 및 보험 등에 대한 합의사항들은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교류에 대비한 제도정비에 크게 기여할 것임.

나. 부정적 측면

- 경수로사업 진행과정에서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동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안을 연계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남북관계 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전자의 예로서, 북한이 경수로의 핵심부품이 인도되는 시점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 IAEA의 특별사찰을 거부할 경우 경수로사업이 전면 중단될 수밖에 없을 것임.
 - 후자의 예로서,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이 경수로사업과 연계됨으로써 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었고 한-미간에도 갈등이 발생하였음.
- 잠수함 침투 사건에 따른 경수로협상의 연기는 남북한간의 정치·

군사적 사안과 경수로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선례가 되었던 바,

- 향후 경수로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양측에 의해 유사한 연계전략이 구사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음.

- 경수로사업 종료 후 북한이 공사완료시한 지연이나 경수로의 안정성 등 사업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불을 거부하거나 핵시설 해체를 중단할 경우, 우리 정부가 매우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임.

2. 북한

가. 긍정적 측면

- 경수로사업은 정치적, 재정적, 법적, 시간적 문제를 망라하는 복잡한 사업으로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간에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 북한이 미·일 등 서방세계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과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음.
- 미국이 경수로의 핵심부품을 조달할 경우, 경수로사업은 북·미

관계정상화의 지름길임과 동시에 제도적 보장장치가 될 것임.

- 미국이 핵심부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미원자력법에 의거하여 양국간 원자력협력협정이 필요하며 미국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국가와만 동 협정을 체결하였음.

○ 경수로사업은 북한과 사업에 참여하는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들 사이의 관계개선을 기정사실화 및 촉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참여국들의 경제협력과 투자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경수로건설이라는 제한된 분야를 사실상 서방측에 전면 개방하고 대규모 남한 인력의 장기간 상주를 허용함으로써,

- 북한은 서방 및 남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의 성공적 추진 가능성을 타진함과 동시에 신포지역을 체제적응의 실험장으로 활용함.
- 경수로사업이 성공할 경우, 북한 체제의 대서방 적응능력이 제고됨으로써, 북한 정권은 자신감을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임.

○ 경수로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최소임금이 110달러로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력이 대거 투입됨에 따라 북

한의 당면한 외화부족과 심각한 경제난 해소에 기여할 것임.

나. 부정적 측면

- 경수로사업은 사업에 참여하는 북한 관리와 주민들이 남한 체제의 우월성과 북한 체제의 후진성을 깨우치고 이를 북한 전역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 지도부와 체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비판의식을 강화함과 동시에
 - 하층부에서의 내부소요 발생시 이를 유지·강화하는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음.

- 경수로사업을 통해 북한과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데 비례해서 서방의 대북한 통제능력이 강화됨으로써,
 - 북한의 합의사항 위반행위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하는 경우 통제수단이 빈약했던 과거와 달리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북한의 대서방 관계개선에 따른 상황적 변화는 북한이 남북관계에서도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이 될 것임.
 - 또한 “벼랑끝 전략”에 의거한 파행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

제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임.

3.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

- 주변국의 대북 접근 측면에서 경수로사업이 갖는 의의는 사업의 기반이 되는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KEDO는 한국전쟁 이후 주요 관련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공식적으로 또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최초의 다자간 협의체로서,
 - 한·미·일 3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심도있게 그리고 빈번히 정책을 조율하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대북 식량지원 등 다른 사안에 KEDO식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은 KEDO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임.
- 한편, 남북관계가 냉각된 상태에서 KEDO는 한국의 중요한 대북 접촉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KEDO는 남북한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하면서 한국이 경수로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임.
 - 따라서 KEDO를 통한 경수로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KEDO는 상호접촉의 구도를 경쟁적 관계에서 공동이익의 존재를 인식하고 실현하는 구도로 바꿈으로써 관련국들간의 다양한 협력가능성을 증대시킴.
- KEDO가 추진하는 사업에 관련된 문제들 뿐만아니라 양자간 및 다자간의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도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북한과 미, 일 등 서방국들간의 관계개선이 촉진될 것임.

IV. 한국의 고려사항

1. 주요 고려사항

- 〈북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 가능성〉: 미국이 제작한 경수로 핵심부품이 공급될 경우, 북미 원자력협력협정의 체결과 협정에 대한 미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바, 북미는 이를 계기로 양국관계를 급진전시킬 가능성이 있음.
 - 특히 미국은 경수로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이 되므로 북미 원자력협력협정 체결과 이에 상응하는 양국관계의 진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이용하여,
 - 자국산 핵심부품 공급을 통한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를 대내외적으로 합리화하려 할 것임.

- 〈KEDO식 접근법의 광범위한 적용〉: 미·일 등이 북한과 관련된 다른 분야에서도 KEDO식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국익 확보차원에서 한반도문제에 대한 제도적 개입을 강화하려 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움직임은 남북대화가 단절된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자주적인 문제해결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고 분단을 고착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경수로사업과 정치·군사적 사안의 분리>: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사안과 분리하여 경제·과학·기술분야의 협력차원에서 경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북한이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부담없이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경수로사업은 정치적인 문제에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당국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필요함.
 - 특히 경수로사업은 한국이 주도하더라도 KEDO를 통해 미·일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로 인해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경우 다른 KEDO 참가국들과 마찰이 야기될 수 있음.

- <북한 주민 접촉시 행동지침 교육>: 경수로사업을 계기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경계심을 강화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우리 기술진과 근로자들에 대해 남북한의 관습과 사고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측의 실수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갖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민간차원의 대북경협 지연 명분 상실>: 경수로 부지준비공사의 착공으로 남북한간에 대규모 경제협력이 현실화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가 민간차원의 대북협력과 남북교류를 미룰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짐.

- 경수로사업이 KEDO의 틀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민간 차원의 남북교류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논리는 국민을 설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함.

○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의 가동>: 현재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이하, 핵통위)로 이관하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함.

- 이는 경수로사업이 사실상 남북한의 교류·협력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점과 기존의 남북한 합의사항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국내외에 부각시킬 수 있는 조치임.
- 북측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 핵통위에서 경수로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을 논의하도록 유도함.

○ <남북한 상호협력의 필요성 증대>: 최소한 7~8년이 소요될 경수로사업은 남북대화과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될 수밖에 없는 바,

- 남북한은 대결을 지양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할 수 있는 생산적인 정책을 펴는 데 각별히 노력해야 함.
- 양측이 자주적이고 상호협력적인 자세를 갖는 데 충실했다면 경수로사업은 이미 수 년전에 시작될 수 있었던 사업임.

2. 전략적 차원의 대책: 연계전략의 활용

- 남북한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때 대부분 전제조건을 제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의 남북대화 전략이 사실상 연계전략의 일환이었음.
 - 이는 연계전략이 쌍방간의 신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략의 구사에 따른 위험도가 적음으로써 가장 쉽게 구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기 때문임.

가. 연계전략 구사의 문제점과 대책

- 남북한이 그동안 구사해 온 연계전략은 관계개선에 기여하기 보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경우가 더 많았는 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①남북한간에 협력이 도출될 수 있는 관계의 미성숙, ②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양측의 인식 부재, ③연계전략의 장단점에 대한 연구의 미비, ④연계전략을 구사해야 할 시기 선택의 문제점, ⑤연계전략에 이용되는 대상 선택의 문제점.
- 더욱이 전략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실리획득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치적 명분을 우선시하는 가운데 무리한 연계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실패를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음.

- 한국은 연계전략의 구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할 것임.
 - 첫째, 연계전략의 효과를 너무 과대평가해서는 않됨.
 - 둘째, 연계전략이 효과적인 정책 개발에 실패했을 경우의 차선책으로 혹은 남북대화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셋째, 연계전략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역연계전략의 사용가능성 등이 치밀하게 사전검토되어야 함.
 - 넷째,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연계전략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 보다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큼.
 - 다섯째, 다양한 연계전략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융통성있게 구사되어야 함.
 - 여섯째, 연계전략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행위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보상약속이나 위협이 신뢰성을 지녀야 함.

나. KEDO에서 한국의 연계전략 활용 방안

- 제네바 기본합의문은 고도의 연계전략의 산물인 바, 기본합의문에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KEDO 참여국들이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국은 기본합의문의 서명자가 아니지만 KEDO의 집행이사

국으로서 경수로사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 경수로사업을 북한 핵문제 해결 뿐만아니라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국은 연계전략이 필요함.
 - 다만 정치·군사적 사안과의 연계는 사업의 중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바, 연계의 대상을 사업중단의 위험이 적은 경제·과학기술적 분야에 국한함.

- 한국은 KEDO라는 다자협의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⁴⁾

- 첫째, KEDO의 사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와 연관이 없는 문제를 이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일 무역역조 시정차원에서 일본이 경수로비용의 많은 부분(30% 이상)을 부담하도록 요청하거나,
 - 식량지원을 대가로 북한이 경수로사업 진행과정에서 남북한 관계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들(예: 북한 원자력기술자들

4) 다자협의체 구성원들이 연계전략을 구사한 사례로서 유럽경제공동체(EEC) 회원국들이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협조를 요청하는 영국을 상대로 연계전략을 구사하여 EEC의 현안문제에 대한 영국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을 들 수 있음. 즉 EEC 회원국들은 EEC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EC 외부의 문제를 연계하였음. Lisa Martin, "Institutions and cooperation: sanctions during the Falkland islands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1992), pp. 164~171 참조.

에 대한 한국내 훈련 실시)을 수용하도록 요구함.

- 둘째, 경수로사업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기여로 입지를 강화한 우리 정부는 KEDO와 관련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EDO의 주요 문제를 연계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대북 경수로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대가로 한국의 원자력발전소 해외 수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획득하는 연계전략을 구사함.
- 결과적으로 한국은 KEDO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의 사안을 연계하고, 역으로 KEDO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의 사안을 연계하는 양면적 연계전략을 구사할 수 있음.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禧의共著 申相振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5,7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	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외 共著 제성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i>	옥태환 전현준외 共著 제성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i>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4,5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5,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5,5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4,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5 (1996)</i>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은 10만원, 학생회원은 7만원, 기관회원은 15만원임.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
(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86, 901-2613, FAX:901-2547)

대북 경수로지원사업과 남북한 관계

統一情勢分析 97-07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安保政策研究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901-2526(代), FAX: 901-2547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7년 9월 일

發行日 1997년 9월 일
